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입장문

검찰은 서해사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진실과 개혁에 눈을 떠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의 25개 공소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한 오랜 재판의 결과였다.

검찰이 주요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의 은폐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이 지시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뿐 아니라 검찰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군 특수첩보(SI)는 지금도 버젓이 국정원과 군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이 주장한 소위 ‘월북몰이’와 관련해서는 ‘미리 특정한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여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을 분명히 판시했다.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또한 ‘그러한 판단 및 근거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이를 선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과 형사 기소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나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착수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거론하면서, 특히 2022. 6.10 국가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번복 발표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측은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정보보고서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김태효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할 때 국방부도 같이하라’며 ‘국방부 입장이 너무 약하다’는 취지의 질책을 하였고, 이후 번복 발표가 이루어진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의 안보와 남북관계 책임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음해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국민들의 신임을 유지할 수 없었던 취약하고 무도한 정권이었음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모한 군사적 시도를 감행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 했겠는가. 사건의 발단으로 보나, 재판의 결과로 보나 애당초 이 사건은 시작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 반 동안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은 과거 정부의 안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건의 조작기소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 시점까지도 검찰이 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이는 여전히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과 집단적 이해에 빠져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징계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가 달랐음에도 상고 포기를 지휘했고,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때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 항고를 포기하여 내란범을 석방했다. 그들의 이해가 진실이고, 그들이 불리한 법원의 판결은 진실이 아니란 오만한 태도와 선민적 사고 아닌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항소 여부 검토가 아니라 이 하명사건을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에 오늘이라도 착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알이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 시각 이후 검찰의 행동을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때 우리 당은 이에 응당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일동